

# ‘발전’ 너머, 새로운 역사쓰기의 가능성: 한국의 식민지기 경제사 연구의 향방

양지혜 (동북아역사재단)

## 1. 2011.03.11.

녕하세요. 양지혜라고 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새로운 ‘글’을 발표하는 자리이기 보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 글(문어)이 아닌 말(구어)로 발표문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20세기의 전쟁·식민지 지배와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 되어 왔는가’라는 묵직한 주제 앞에서, 2011.03.11.이라는 7개의 숫자를 먼저 꺼내보고 싶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있던 날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이 날이 특별하게 기억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연구자에게 어떤 세대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저는 스스로를 2011년 3월 11일 이후의 세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대지진 이후 10여년의 시간동안 저와, 동시대를 살아 온 여러 한국의 연구자들이 이 비극 앞에서 어떤 고민을 나누었는가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 2. 3.11과 인류세, 그리고 한국근대 경제사 연구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2021년은 어떤 해였을지 궁금합니다. 3.11이 10주기가 되던 2021년, 한국의 지식장(知識場)에서 이 사건은 거의 완전히 잊혔습니다. 한국 최대의 연구 검색시스템인 Riss.kr에 따르면, 그해 한국에서 발표된 동일본대지진 관련 연구는 5편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생태환경(ecological environment)에 대한 관심은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전지구적 팬데믹의 유행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부상한 이 개념은 언론, 출판, 학술 등 지식장 전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키워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근대 경제사 연구는 ‘경제’와 ‘발전’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도 이러한 망각과 부상의 출렁임에 다소 거리를 둔 채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흐름을 거칠게 몇 가지 기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1990년대 이전까지 전개된 ‘수탈론’과 ‘근대화론’의 대립입니다.<sup>1</sup> 해방 이후 식민사학으로부터의 탈피를 내세우며 제기된 ‘수탈론’은 초기에는 일본제국주의가 강제력을 이용해 토지와 미곡을 빼앗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무조건 빼앗겼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원시적 수탈론’은 이후 연구가 심화되며 ‘구조적 수탈론’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본주의화를 통한 개발이 진행되었지만, 그 개발의 목적은 토지, 쌀, 지하자원, 노동력 등을 수탈하는 데 있었다는 논의입니다. 이와 동시에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식민지하 경제성장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소위 ‘식민지근대화론’으로 불리는 논의입니다. 이들은 일본이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해 경제개발을 촉진했고, 이 과정에서 조선인 자본가와 노동자 역시 성장도 도모했으며, 이후 그 시설과 맨 파워(man power)가 식민지 유산으로 해방 후의 고도성장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수탈론’과 ‘근대화론’의 이항대립구도는 2000년대 이후 ‘식민지근대성론’이 제기되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근대성론은 기존의 논의가 ‘근대’를 곧 ‘선(善)’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근대주의’의 단선적 발전주의와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담론을 벗어나, 실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sup>2</sup> 이 과정 속에서 특히, 경제사 연구에서는 ‘저항’과 ‘협력’ 사이의 양자택일형의 대립적 시각을 넘어, 수도권 전기 등 사회간접

---

<sup>1</sup> 해방 이후 한국근대 경제사연구에 대한 사학사 정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 정태현,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성찰』, 선인, 2007.; 이승일 외,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동북아역사재단, 2009.; 박찬승, 『21세기 한국사학의 진로』, 한양대출판부, 2019.; 특히, 식민지 지배하에서 전개된 중공업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기획이었던 ‘조선공업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사 정리는 류상윤, 「한국 근현대 경제사 연구에서 제시된 역사상」, 『경제사학』 55, 2013.; 배석만, 「일제강점기 공업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역사와세계』 48, 2015.; 배성준, 『한국 근대 공업사 1876~1945』, 푸른역사, 2022를 참고.

<sup>2</sup> 식민지근대성론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는 「(대담)식민지근대성론의 역사와 현재」, 『역사비평』 136, 2021.를 참고.

자본의 개발에서 민족을 가로지르는 협력의 사례 등이 주목되었습니다.<sup>3</sup>

### 3. 발전 너머에서: 생태-경제사의 접근법

동일본대지진이라는 분기점 이후의 ‘각성’을 기억하려는 움직임들, 이를 토대로 ‘발전’과 ‘성장’을 새롭게 바라보는 다양한 시도들 역시 이러한 틈새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연구는 한쪽에서는 ‘수탈론’의 재등장이라는 비판을, 다른 한쪽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파편화’를 보여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그 연구의 구체적 양상이 제대로 정리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이미 공해사(公害史)나 환경사(環境史) 연구가 높은 수준에 오른 중국이나 일본 학계와 비교해(서구의 Asian studies를 포함), 한국에서는 환경사적 시각이나 접근 역시 아직 학문적 발언권을 충분히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최근 발표되는 여러 연구 중 발전과 성장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생태-경제를 연결하는 역사연구(ecology-economy history)의 특징들과, 몇 가지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으로 초보적인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표> 기존 경제사와 생태-경제사의 비교

| 구분     | 기존 경제사              | 생태-경제사                |
|--------|---------------------|-----------------------|
| 개발의 정의 | 경쟁적 욕망에 의한 자연발생적 개념 | 통치를 위해 만들어진 역사적 개념    |
| 분석의 대상 | 전문가(관료·기업·지식인) 중심   | 이해당사자(지역주민·노동자 등) 포함  |
| 인간의 개념 | 고립된 개인              | 다중 스케일의 관계망 속 개인      |
| 연구 방향  | 하향식                 | 상향식                   |
| 연구 방법  | 화폐적 지표·양적분석         | 물리적·생물학적 지표, 탈지표·질적분석 |
|        | 경제학중심               | 다학제                   |
| 추구     | 효율과 최적의 성장·배분·후생    | 지속가능성과 필요충족           |
| 평가     | 비용편익 분석             | 다차원적 가치 측정            |
| 이념     | 성장주의, 공리주의, 기능주의    | 지속가능주의, 생태환경주의        |

<sup>3</sup> 윤해동 엮음,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 책과함께, 2013에 수록된 연구들을 참고.

|    |          |           |
|----|----------|-----------|
| 논점 | 경제성장의 경로 | 경제성장의 다면성 |
|----|----------|-----------|

※ 출전: Arturo Escobar, *Encountering Develop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Robert Potter et al., *Geographies of Development*, Prentice Hall, 1999.; 질베르 리스트, 신혜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2013.; 김병권, 『기후를 위한 경제학』, 착한책가게, 2023.

잘 알려진 것처럼, 경제발전에 대한 연구는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학’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근대화 이론’의 성립을 계기로 전지구적인 경제성장 논의로 그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1960~70년대를 거치며 경제와 환경의 충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의 전지구적인 에너지·기후·환경·금융위기를 거치며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이를 성찰하는 생태-경제학의 방법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여러 역사 연구 역시, 학문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개발’을 인간 누구나가 본질적으로 추구한다는 기존 경제사의 접근에서 벗어나, ‘개발’을 역사적 구성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발전욕망 외에도 협동·상호성과 같은 여러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개발’ 개념은 제국주의하의 식민지 지배와 냉전기의 체제경쟁 속에서 통치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 속에서 기존에는 엘리트층 중심으로 해왔던 분석의 대상을, 지역주민이나 노동자와 같은 ‘개발’의 이해당사자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개념 역시, 기존 경제사에서는 이해관계를 쟁하는 고립된 개인으로 정의했다면, 대안적 흐름에서는 세계, 국가, 지역, 마을, 가족과 같은 다중 스케일의 촘촘한 관계망 속에 놓인 관계적 존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 방법 역시 기존에는 GDP·GNP와 같은 화폐적 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양적 분석을 중시했다면, 대안적 시각에서는 화폐적 지표로 환산할 수 없는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지표나 지표중심 접근에서 탈피한 질적 접근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 시각에서는 효율적인 경제성장의 모델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대안적 시각에서는 각 개발 현장의 고유한 정치·역사·문화·사회·공간·생태적 특성의 총합 속에서 그 고유성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경제성장의 성과와 함께 그 과정에서 특정 공간·계층·환경에 전가해 왔던 불평등과 피해를 밝히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중심의 개발

에 대한 접근을 성찰하며 이를 대신할 대안적 패러다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 4. 식민지 조선의 생태-경제사: 몇 가지 사례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 하에서 일제하 식민지 조선의 개발을 생태-경제사적으로 접근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가. 개발과 ‘무지(無知)’의 비극



※ 출전: <사진1>은 成田潔英(1958), 『王子製紙社史』 3, <사진2>는 『朝鮮日報』 1933.8.29.; 강정원, 「일제시기 펄프제지 산업의 확장과 ‘개발재난’-王子製紙를 중심으로-」,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8, 2023에서 재인용.

위의 사진은 2023년 발표된 강정원의 연구에 수록된 것으로,<sup>4</sup> 왕자제지(王子製紙) 공장의 폐수를 온천과 같은 ‘약수(藥水)’로 오인한 민중들이 폐수가 나오는

<sup>4</sup> 강정원, 「일제시기 펄프제지 산업의 확장과 ‘개발재난’-王子製紙를 중심으로-」,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8, 2023.

하수구로 몰려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폐수에는 제지원료인 원목을 녹이기 위해 혼합된 유황과 양재물, 기타 유해약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목재를 썬 폐수가 펄펄 끓는 “온천”처럼 방류되자, 그 유해성을 모르는 민중들이 이를 약수로 오인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왕자제지는 이미 일본 본토에서 1911년부터 어민들의 항의를 받아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위로금을 지불하거나 소송을 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에서는 이곳이 “조선인 까닭”에 “매우 수고스럽고” “성가신” 폐액 처리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공해에 대한 식민지민의 무지, 그리고 그 무지 속에서 오염수를 제 몸 안팎에 끼었고 있는 이 비극적 장면은 식민지의 민중들에게 ‘개발’이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미 폐수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에는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오염물 방류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의 모습을 통해, 식민지의 경제구조가 가진 극단적 단면을 보여줍니다.

## 나. 개발과 재난

한편, 개발에 대한 낭만적 구상이 불러온 비극을 다룬 사례 역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일제하 조선의 대형 댐 개발과 북부의 산림지대 내 개척촌 조성을 다룬 양지혜의 연구입니다.

먼저, 전력 개발 사업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sup>5</sup> 아래 만평의 묘사처럼, 식민지기 일본의 기업들은 조선 북부, 즉 지금의 북한 지역에서 ‘유역변경식 기술’이라는 최신식 공법을 이용해 대형 댐을 잇달아 건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위 ‘조선공업화’로 불리는 중공업화의 동력이 형성되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력과 중공업화의 전개라는 ‘생산력 증가의 지표’에 관심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댐 건설 이후 급격한 지역 환경에 재편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허술하게 건설한 제방의 붕괴, 봄철의 잦은 기근, 여름철의 빈번한 홍수가 끊임없이 발생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때, 일본 본토에서는 수력전력 개발에 앞서 수리권 이용료를 기업에 강제해 하천정비사업을 동시에 추진했으나, 조선에

---

<sup>5</sup> 양지혜, 「일제하 대형 댐의 건설과 ‘개발재난’: 일본질소의 부전강수력발전소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89, 2020.

서는 기업에게 이러한 비용을 면제했음을 주목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왕자제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규제 공백’ 문제입니다. 이 연구는 역설적으로, 개발 그 자체가 지역사회에 하나의 거대한 재난이었다고 분석합니다.

① 화력전력 개발과 비용



② 화력전력 개발과 수력전력 개발



③ 수력전력 개발과 지역민의 배상금 요구



④ 조선으로 간 일본질소



⑤ 본문(발췌)

- 조선회사원: 무엇보다도 내가 싸다고 생각한 건 첫째로 水利權이 공짜라는 거야.
- 일본회사원: 内地라면 비싸게 팔기도 하고, 비싸게 값을 매겨서 자본이 엄청 들 텐데.
- 조선회사원: 그게 없을 테니 우선 수리권 매수비라는 엄청난 낭비가 없지. 둘째로는 인접지역[원문은 沿道町村 - 인용자]의 불평이 적어.
- 일본회사원: 그 말은?
- 조선회사원: 아이고, 수리. 관계에 불평이 생긴다느니, 여러 가지로 인접지역에 불평이 생기겠지. 그것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과 수수료가 들고, 꽤 많은 배상금을 뜯기지.
- 일본 회사원: 그렇지.

※ 출전: 下村海南, 1929 『さし潮ひき汐』, 日本評論社, 155-164면.

※ 비고: 실제 삽화의 그림과 하단의 대화가 일대일로 대응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4컷의 삽화를 인용하고(①~④), 주요 대화 내용은 별도로 일부만을 발췌했다(⑤). 각 삽화의 번호와 제목은 편의상 필자가 임의로 기재했다.

이어서, 조선총독부와 여러 기업들이 조선 북부의 산림지대에서 실시한 개척촌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sup>6</sup> 총독부와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일본 제국 내 과잉인구, 특히 한반도 내의 화전민·빈농·이재민·개발난민을 조선 북부의 산림에 입식(入植)시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또 다른 옥토(沃土)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구상했습니다. 기획자들은 홋카이도 등 일본제국 내에서 최신의 고지대 농학 기술과 종자를 도입하는 한편, 상품 유통망을 확장해 개척촌에서 과학·효율·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 결과 함경남도과 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산림에 화전민, 빈농, 이재민 등이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고지대의 토양과 극단적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며, 사업은 전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들 지역에서는 기근 속에 굶어죽는 자들이 속출하였고, 총독부는 ‘개척촌’이라는 정착형 농촌이 아닌, 각종 건설 공사장으로서의 노동이민 정책으로 빈민 인구 수용 정책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발 현장에 대한 구체적 이해 없이 추진된 개발정책이 또 다른 재난으로 끝난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 다. 전쟁 속의 폭동

이번에는 중일전쟁 이후, 전시하(戰時下)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2014년 발표된 가토 게이키의 연구에서는,<sup>7</sup> 1938년 황해도 봉산군의 아사노(淺野)시멘트공장에 대한 주민운동의 사례가 다루어졌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아사노시멘트 공장의 매연과 돌가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공장 측에 수차례 ‘방진 설비’ 등의 공해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아사노시멘트공장이라고 하면 전국 각지에 수많은 공장이 있고 (...) 방진기계가 없으면 부근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정도를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 일본 본토에서 아사노시멘트는 일찍부터 공해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 그에 대한 소송과 손해배상의 전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조선인들 역시 이 점을 정확히 지

---

<sup>6</sup> 양지혜, 「탁상 위의 유토피아: 일제하 조선 북부의 개척촌 구성과 실패」, 『사림』, 81, 2022.

<sup>7</sup> 加藤圭木, 「朝鮮植民地支配と公害-戰時期黃海道鳳山郡を中心に-」, 『史海』 61, 2014.



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당국의 규제와 공장의 대책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이 글은 분노한 지역주민 2~300여 명이 공장을 습격해 설비를 파괴하는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중일전쟁 이후 한반도의 중공업화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며 ‘식민지에서의 공업 투자’라는 측면에 집중했다면, 이 글은 급격한 군수공업화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민중의 ‘폭력’과 기업·민중 사이의 ‘충돌’로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공해’가 아닌 ‘폭력’만이 주목을 받아, 공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얻지 못한 채 종식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회사 부근에서 생활하려고 한다면 매연을 마시는 건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당시 회사 측 담당자가 남긴 이 발언은 전시하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에 대한 많은 고민을 던집니다.

## 라. 공해, 식민지의 유산?

이러한 고민은 해방 후 식민지가 남긴 유산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식민지 유산은 주로 철도, 항만 등의 물적 유산이나 식민지 하에 육성된 기술·노동자 등의 인적 유산을 의미했습니다.<sup>8</sup>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전개된 일본으로부터의 공해수출 문제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sup>9</sup> 이러한 연구들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이후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이 속도전 방식의 경제발전을 위한 (농약 등 각종) 공해 유출, 한반도 남동해연안(일본과 마주보는 해안지역으로, 1970년 야쓰기구상에 기초해 건설) 공업지대로의 산업공해 오염의 전가, 또한 ‘원조’ 또는 ‘투자’라는 명목으로 일본제국의 역사에서 시작된 물자·지식·기술 등의 intra-Asia network

---

<sup>8</sup> 관련 논쟁에 대해서는 허수열, 「11장. 공업화유산」,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2, 책세상, 2012; 이대근, 『귀속재산연구』, 이숲, 2015를 참고.

<sup>9</sup> 신재준, 「1970년 전후 공해의 일상화와 환경권 인식의 씨앗」, 『역사문제연구』 45, 2021; 고태우, 「1970년대 한국의 공해 상황과 재난 인식」, 『개념과 소통』 28, 2021; 이슬기, 「농약을 중심으로 본 녹색혁명: 1970년대 증산과 공해에 가려진 농약 중독」, 『한국과학사학회지』 43-1, 2021; KANG Yeonsil, “Transnational Hazard: A History of Asbestos in South Korea, 1938–1993”, *The Korean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43-2, 2021; 양지혜, 「1970년대 한일 간 ‘발전’과 ‘환경’의 뒤얽힌 정치: 중화학공업화 전환과 일본 공해산업수입을 중심으로」(forthcoming).

가 1970년대에 부활했다<sup>10</sup>는 주목할 만한 사실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진정, 식민지의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이 글들은 식민지하의 무분별한 개발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폐광산들,<sup>11</sup> 공해에 노출되어 병을 앓는 몸이야 말로 식민지로부터 이어진 ‘느린 폭력’이자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의 유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sup>12</sup>

## 5. 발전 너머의 역사학, 한계와 가능성

한국은 여전히 ‘경제성장우선주의’가 압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입니다. 한편으로는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사태,<sup>13</sup> 2019년 □반일종족주의□ 출간 이후 본격화된 역사부정론의 강화<sup>14</sup> 등으로 인해, 현실정치와 학문이 대치해야 하는 상황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랜 역사 갈등의 대상이 되어 온 한국근현대사는 ‘진영 논리’의 틀 안으로 쉬이 환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2011년이라는 하나의 분기점을 뚫고 새로운 역사상이 나타나는 점에 더 많은 주목을 바라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단’으로서의 세계가

---

<sup>10</sup> 해방후 일본의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ODA와 일본의 식민지·점령하 동아시아 ‘경제/환경’지배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Aaron Moore, *Constructing East Asia: Technology, Ideology, and Empire in Japan's Wartime Era, 1931-1945*, Stanford Univ Press, 2013; Mizuno, Hiromi, et al., eds. *Engineering Asia: Technology, Colonial Development, and the Cold War Order*. Bloomsbury Publishing, 2020; David Fedman, *Seeds of Control: Japan's Empire of Forestry in Colonial Kore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20를 참조.

<sup>11</sup> 양지혜, 「근현대 한국의 광업 개발과 ‘공해(公害)’라는 느린 폭력」, 『역사비평』 134, 2021.

<sup>12</sup> 양지혜, 「'개발'의 한계선상에서: 그림자 사람들이 말하는 '개발'과 '개발 너머」, 『내일을 여는 역사』, 79, 2020.

<sup>13</sup> 극우주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기존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된 문제로, 2015년 당시 박근혜정부가 ‘균형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려 역사교과서를 단일 국정 교과서로 서술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며 본격화되었다. 이후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그 동력이 상실되었으며, 역사교육에 대한 정치의 외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많은 우려를 낳았다.

<sup>14</sup> 일본군‘위안부’, 전시하의 조선인 강제동원 등의 피해를 전면 부정하는 역사관으로, 일본의 역사인 식문제연구소, 한국의 낙성대경제연구소, 미국의 마크 램지어 등 국제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닌, 이웃하며 살아가는 ‘장소’로서의 세계를, 만물을 화폐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닌, 팽창과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징하게 인식하는 새로운 역사관 말입니다. 이들 시도에는 많은 가능성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들 연구가 더 의미있는 성과로 확장될 수 있는 지혜를 전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양지혜 (梁 知惠 / YANG Jihye)

2021 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 졸업.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국근현대 사회경제사, 생태환경사 전공

주요저작: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日本窒素の水力発電所建設と「開発難民」問題, 日韓相互認識 9, 2019. A Locked City: The Japanese Company Nitchitsu’s Building of Hŭngnam, Seoul Journal of Japanese Studies 8, 2022. Competing Memories of Mega-Dam Development in Colonial Korea: From Science to Disaster, Acta Koreana, 25-2, 2022.